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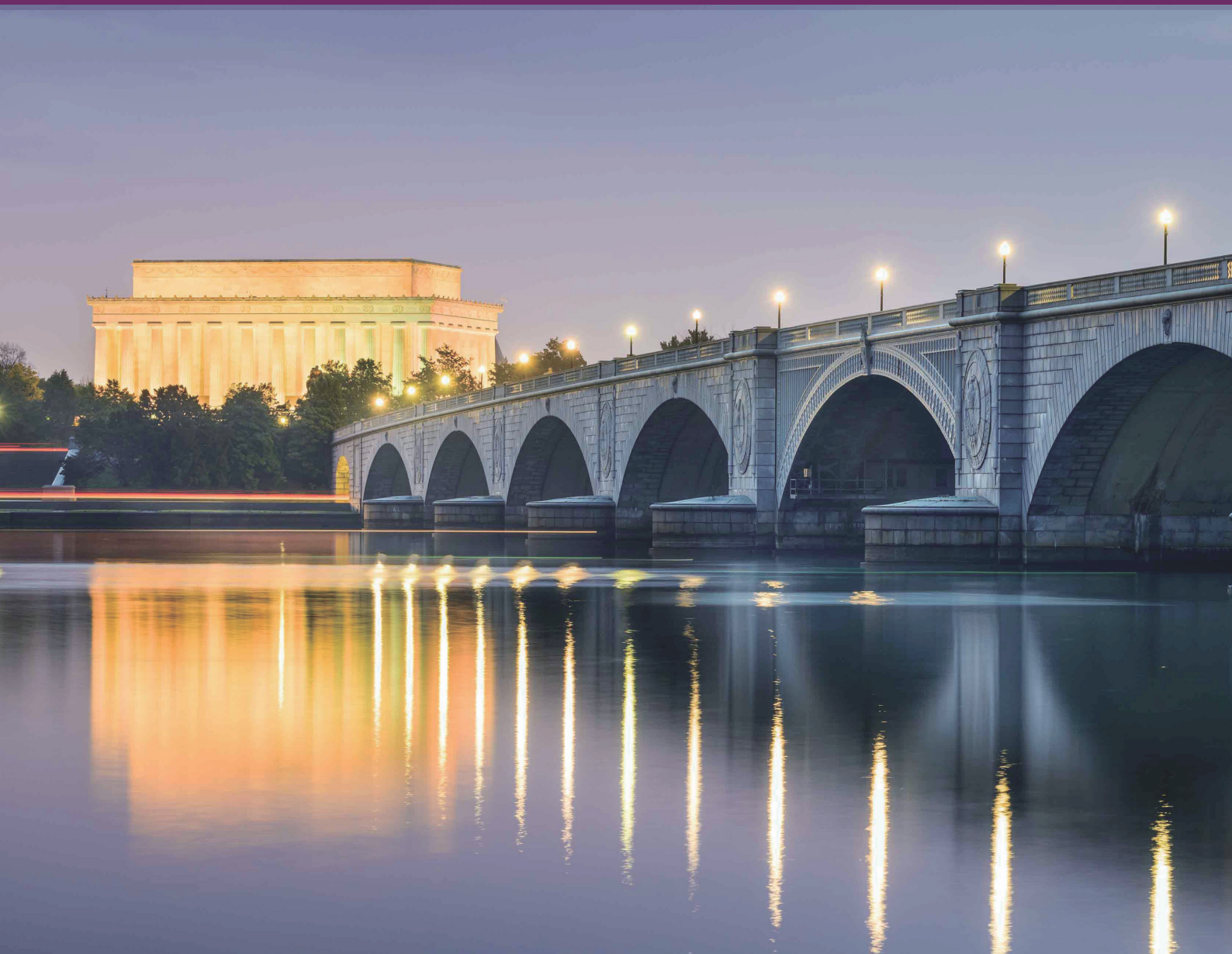
통상 News Brief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SHIN & KIM International Trade Law Center

특별호
2020 Vol. 3

Contents

바이든 시대의 통상환경 전망	03
1.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미·중 관계전망	03
2. 바이든 시대의 외교 안보 지형	09
RCEP 타결의 의미와 활용	12
3.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를 통한 RCEP의 특징	12
4. RCEP과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	15
3-4분기 주요 통상뉴스	18





바이든 시대의 통상환경 전망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미·중 관계전망

신각수 고문

현재진행형인 팬데믹 코로나19는 3차 확산으로 지구촌을 흔들며 큰 경제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이벤트 중 하나는 11월 초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선거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현직으로서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선 실패는 20세기에 1932년, 1980년, 1992년 3회밖에 없었고 금세기에 들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드뭅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양극화된 미국 사회에서 반기독권·포퓰리즘의 비정통 보수 트럼프 정권이 중도 진보의 바이든 정권으로 바뀔을 의미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선거’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는데, 과거 선거보다 현저히 높은 투표율과 치열한 선거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과반에 가까운 7400만 표를 얻은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하원에서도 선전함으로써 트럼프즘이 여전히 위력을 떨치는 미국 사회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도 트럼프즘은 계속된다는 점은 바이든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즘을 촉발한 미국의 사회경제 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고, 공화당이 이미 이념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미국은 경제·인종·정치·세대 격차의 확대로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사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 의하면 상위 1% 고소득층의 보유자산은 최근 20년 동안 7% 상승하여 33%인 반면, 상위 50% 저소득층은 2% 하락하여 2%에 불과합니다. 인종 면에서도 현재 60%인 백인이 2045년경에는 절반이하로 떨어져 ‘무지개국가’로 변하는 가운데, 양당이 모두 정체성정치를 통해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 간에 혐오감·적개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면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큼니다. 이런 분열이 트럼프즘을 키우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분열의 상처 치유와 통합을 기치로 내세운 점은 이런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 기인하고 미국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외교안보정책 변화방향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s back)”라는 구호에서 보듯,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의 지도력회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미국을 국제질서의 헤드테이블에 되돌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의 동맹과 다자주의를 무시하는 거래적·파괴적 외교행태를 청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외교의 군사화를 억제하기 위해 외교, 개발, 제도를 중시할 것입니다. 바이든의 외교안보정책은 트럼프 외교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홀로(America Alone)’로 귀결되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동맹국·동반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바이든 구상의 배경에는 오바마 정부의 전(前)국무부 차관이자, 바이든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블링켄(Blinken)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GDP 21%에 불과한 미국 홀로 뛰는 것보다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선진민주국가들과의 연합이 훨씬 실효적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물론 미국 혼자 국제질서를 유지하기가 힘든 현실에 비추어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도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 반부패, 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를 지향할 것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를 담당할 고위인사들의 풍부한 경험에 비추어 방법론적으로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다자주의와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UN인권 이사회,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등에 복귀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도 재가입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도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對中) 대결 정책은 지속될 것이나 예측가능하고 규범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의 러시아 공세에도 대서양 양안관계 강화로 대응하고, 중동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치적인 이스라엘-아랍 화해를 기반으로 이란에 대한 억지와 연계를 병행하면서 이-팔 문제의 해결 여건을 조성하려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조기 진압, 경제침체 회복, 인종차별 대처, 기후변화를 중점과제로 내세운 데서 보듯이, 바이든 정책의 핵심은 내정에서는 통합, 외치에서는 세계리더십 회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외교’와 같이, 정치적 대립, 경제적 침체, 사회적 분열로 어려운 국내 사정을 추스르는 데 방점을 둘 것이며 대외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미·중관계 전망

바이든 외교의 가장 핵심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있기 때문에, 대중(對中)정책은 미국 대외정책의 최대과제로 다룰 것입니다. 이는 미국 사회에 지식층이나 일반 대중, 보수나 진보 구별 없이 초당파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對中)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통해 중국과의 대결에 힘을 실을 것입니다. 미중 대결의 중심축이 동아시아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트럼프 정부가 기본 개념을 구축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려 할 것입니다. 현재 미중 간에 형성된 단층은 무역과 기술에서 이념, 군사, 남중국해, 대만, 인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다기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모든 전선에서 대중(對中)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기후변화, 팬데믹, 세계거시경제 조정 등 미중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연계해 가되, 경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동맹국·동반자와의 연합을 통한 압박을 통해 중국의 행태를 고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하지만 실효적인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중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대립이 완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악화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무역의 경우 공정무역을 위한 노동·환경·보조금·지식재산권 등 미국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양자·지역·세계 차원에서 대중 공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EU와 함께 WTO의 정상화를 통해 무역 규범과 절차를 공정 경쟁의 토대 위에 올려놓으려 할 것입니다.

대중(對中) 기술경쟁은 미중 패권경쟁을 결정하는 경제력의 핵심요소이고 군사적 차원에서도 미국이 추구하는 3차 ‘상쇄전략(offset strategy)’에 의한 군사 우위 확보에도 결정적 요소라는 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에 의한 1차 상쇄전략, 정밀무기에 의한 2차 상쇄전략으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누려 왔는데, AI, IoT, 로봇, 드론, 양자 계산 등을 3차 상쇄전략의 주력으로 삼고 중국의 제조2025 계획을 통한 10대산업 육성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 분야에서 미중 탈동조화에 의한 ‘죽의 장막(bamboo wall)’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분야보다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 동조압력도 거셀 것으로 판단됩니다. 5G, 데이터, 반도체 등 미중 기술경쟁의 핵심요소에 대한 상호 견제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공세에 대해 중국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의 대중(對中) 자세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응 태세를 굳히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를 건드리거나 중국공산당을 겨냥한 정권교체(regime change)까지 거론하는 트럼프 정부보다는 바이든 정부가 낫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의 대중(對中) 자세가 덜 강경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보다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먼저 미국을 도발하는 직접적 행위는 자제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오쩌둥의 ‘담담타타(談談打打) 타타담담(打打談談)’ 전략으로 미국의 공세를 피하면서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는 장기전을 꾀할 것으로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9년 9월 중앙당교 연설에서 현재 상황을 100년 만에 있는 대변화 국면이라 보고 2050년까지 장기적 투쟁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쌍순환으로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장벽에는 막대한 R&D 투자로 자주창신(自主創新)을 통해 기술자립을 꾀하려고 있습니다. 한편 전랑(戰狼) 외교와 마스크 외교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외교공백을 차지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사실의 은닉 의혹과 지원 자재의 부실 등으로 반발을 초래하여 의도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여 인력 배치와 정책 수립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전반기에는 일단 소강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 미중 대결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대응방향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까요? 미중갈등 국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적·추상적인 형태의 미중 선택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외교의 기축이 한미 동맹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미중 갈등의 여파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의 경우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만큼 연대에 따른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대미 연대에 부담이 있는 경우 다른 사안에서 미국과 협조함으로써 이해를 얻어 운신의 폭을 넓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미중관계가 복잡하듯이 한미관계도 복잡하다는 점에서 고차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사실 판단을 정확히 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일이며, 가치와 규범에 맞는 일관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소통을 원활히 하여 우리의 사정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해야 합니다. 쌍무적 동맹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의 이면에는 동맹국으로서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의 국익과 가치에 부합한다

는 점에서, 지금과 같이 신남방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게 한국은 개도국으로서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 성공한 국가로서 기대가 클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통해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중 무역문제는 거시경제와 직결되어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경제성장의 추동력인 한 미국 의도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품 수입으로 미국 국민 1인당 연간 만불 정도의 저축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경제의 어려움에 비추어 트럼프 정부가 실시한 각종 대중 무역규제를 바로 해제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도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조치들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로서는 바이든 정부와 WTO의 정상화, 보호무역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노동, 환경, 보조금, 지식재산권, 탄소국경세 등을 통하여 공정한 통상환경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화될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별로 치밀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런 상황은 미국 의회에서 기술 분야관련 협조 여부를 미군 주둔과 연계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미 5G관련 화웨이 제품을 쓰는 국가에 미군 주둔을 재고하는 국방수권법안이 제출되었는데, LGU+가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어서 클린 네트워크 가입을 기업에 맡기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이 매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 국가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 관련 분야는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한 분야별 Plan B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준 타격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미중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미중 양국의 대결과 갈등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겠지만,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개별상황별로 타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중시하고 국익·가치·원칙을 기반으로 차분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간 협력과 초당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의 통상환경 전망

바이든 시대의 외교 안보 지형

백주현 고문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정치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지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첫째, 바이든 행정부 앞에는 COVID-19 극복이라는 험난한 길이 열려있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인류 전체가 직면한 바이러스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 팀은 외교, 안보, 경제팀 인선과 더불어 코로나 대책팀의 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선이 확실시 된 11월 9일 의사 및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TF 구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2월 7일에는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라틴계인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를 지명하였습니다. 이는 제프 자이언츠(Jeff Zients)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 로셸 왈런스키(Rochelle Walensky)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차기 국장 지명과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유임에 이은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인류는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적 공포감과 자유를 향한 갈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국가들이 비핵화, 분쟁방지 등의 전통적인 외교 안보 이슈를 다룰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리더십 공백의 장기화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대책팀 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해에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대외 정책은 고사하고 국내정책도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다자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주창해 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본질은 강력한 대외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정책입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고립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세계 경찰로서의 부담도 졌지만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익도 적지 않게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찰의 부담은 지지 않고 미국민들만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문제는 수십년 동안 추진되어온 세계화 및 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발생한 결과를 부정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개방된 교역과 교류를 통해 국가들간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업들도 다국적 기업으로 진화하면서 대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복잡하게 변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반대로 트럼프가 추구해온 글로벌 체제로부터의 이탈은 미국과 미국 기업들의 장기적 이익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다자주의의 회복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한 다자외교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대혼란 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시급한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 탄소제로 산업 정책들의 최전선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구축 등 친환경 인프라에 임기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정부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계획에 1.3조달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분야가 바로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제로 계획입니다. 50만개 이상의 신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400만채 이상의

건물·주택의 냉난방 시설을 고효율화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에너지 지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던 미국의 셰일생산에 대한 규제에 나설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동맹국과 연대를 통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우리나라 등과의 동맹관계 복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미국을 국제정치, 경제의 중심에 위치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은 UNESCO 탈퇴와 재가입, 분담금 납부중단 행위를 반복해왔습니다. OECD에서 다자간 투자협정을 주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의 탈퇴, 이란 핵합의에서의 이탈과 러시아와의 중거리 미사일 협정(INF) 갱신중단도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무대에서 일관된 모습을 잃어가면서 미국의 리더십은 서서히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풍부한 외교적 경험을 지닌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지금 미국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G zero 시대가 시작될지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안정적인 동맹관계의 재정립, 국제적 합의와 규범의 준수, 코로나 같은 전 인류에 대한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기본 축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미국이 코로나 상황 극복에 리더십을 보이고, 동맹국들과의 관계회복에 진실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이란 핵합의 존중, 시장경제 질서 회복, 미중 갈등과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질서 등의 과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 회담과 미북 정상과 같은 커다란 이벤트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할 미국의 행정부의 정책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차분하게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CEP 타결의 의미와 활용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를 통한 RCEP의 특징

김재희 변호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8년 간의 협상 끝에 올해 11월 아세안(ASEAN) 10개국¹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에 의해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RCEP 출범 시 협상에 참여하였던 인도가 결국 불참을 선언한 이후 다시 복귀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참여국의 무역량, GDP 및 인구 등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대 FTA라는 점에서 RCEP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을 상대로 자유무역의 수준을 한-아세안 FTA에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였다는 점에 있어 RCEP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CEP은 협정의 규범적 측면에 있어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분야 등을 위한 별도의 챕터를 도입하여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한-아세안 FTA와 비교하여 더욱 고도화된 수준의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¹ 아세안(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규범적 측면

한-아세안 FTA는 2007년 체결된 관계로 규범은 최근 변화한 통상환경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주로 전통적인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분야에 관한 무역 자유화를 규정할 뿐입니다. 반면, RCEP은 다년간의 협상을 통해 다양한 통상 이슈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여 기존의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분야에 관한 시장개방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총 20개의 챕터(Chapter)에서 지식재산권(제11장), 전자상거래(제12장) 및 통관 절차(제4장)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무역도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온라인 콘텐츠의 확산에 맞추어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제 측면에서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및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의 의무를 두고(제12.14조 내지 제12.15조), 전반적으로 기술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산업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시장에서 규제 리스크를 피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RCEP은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그에 따라 개선된 원산지 기준 및 절차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RCEP은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누적기준'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 활용할 경우 수출경쟁력 향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품무역 분야

RCEP은 상품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관세철폐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보다 아세안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품무역 분야에서의 자유무역 수준은 각 협정국에 의한 관세철폐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RCEP의 경우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더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시장개방 대상품목에는 우리 기업들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및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및 의료위생용품 등 향후 수출이 유망한 품목들도 포함됨으로 인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RCEP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국에 대해서는 1,000여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철폐가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관세철폐 품목에는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및 섬유기계 등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이 포함되었습니다.

서비스무역 분야

서비스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수준이 확대된 가운데 문화콘텐츠 시장에 관한 추가 개방을 이끌어 낸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상품교역 규모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문화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K드라마, K팝 등 한류 문화는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RCEP에서는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제작, 공연, 영화 제작 및 배급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시장개방 수준을 확대한 것입니다.

RCEP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주요 아세안 국가의 문화콘텐츠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필리핀, 태국 등에서 온라인게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영화 제작·배급·상영 및 공연 등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특히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향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및 활동이 기대됩니다.

RCEP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해당 경제권의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향후 더 큰 기대가 되는 무역협정입니다. 우리나라서는 RCEP을 통해 마련된 경제성장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RCEP 타결의 의미와 활용

RCEP과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

박경진 전문위원

2020.11.12.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3일 후에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의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RCEP은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를 아우르는 현대적(modern)이고 광범위(comprehensive)하며, 높은 수준(high quality)의 상호 이익이 되는(mutually beneficial) 통상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제1.3조). 한-아세안 FTA에 이어 RCEP의 공식서명이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무역규모는 1,565억달러에 이르고, 한국의 대(對) 아세안 투자액은 26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세안에게 한국은 5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7번째로 투자를 활발히 하는 국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RCEP의 출현은 2017년부터 이어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이를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 상생 공영, 평화(3Ps: People, Prosperity, Peace)의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아세안 등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²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상호 호혜적 상생번영을 위한 교역확대입니다. 2020년 11월에 발표된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은 코로나-19 등 변화한 정책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7개의 핵심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7대 핵심 협력 분야에는 포스트 코로나

²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하여,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협력, 공동번영의 미래산업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단순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넘어 보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에서는 RCEP의 관련 챕터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문화 분야

교육·문화 분야와 관련이 높은 챕터는 바로 RCEP의 서비스 챕터입니다. RCEP은 기존의 아세안 국가들이 활발하게 취하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뿐만이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제8.3조). 즉, 서비스 시장에 있어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ASEAN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 국가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취하고 있어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일부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는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에서는 열지 않았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챕터도 교육·문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RCEP은 기존의 한-아세안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식재산권 분야를 다루는 지식재산권 챕터(제11장)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관련 규정에서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정보관리를 위한 전자적 권리 관리정보 보호(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규정을 두는 등 최신 지식재산권 동향을 반영하고 있어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분야

RCEP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의 하나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챕터의 도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자 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아세안 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으로 1인당 평균 125달러를 지출했지만, 2025년

에는 39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아세안 전자상거래/플랫폼 서비스 등 인터넷 경제규모는 2015년 320억 달러에서 2025년 30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³

RCEP의 전자상거래 챕터는 당사국들이 문서의 전산화, 전자적 서명의 활성화를 통한 무역/통상 행정과 절차들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제12.5조 및 제12.6조),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제12.7조), 개인정보 보호(제12.8조) 등과 같이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최초로 데이터 현지화 금지원칙(제12.14조)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정보의 국경간 자유로운 전송 원칙(제12.15조)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⁴

RCEP의 체결은 당사국들간의 유무형의 장벽을 제거하여 상품 교역을 활발하게 하는데 유용할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방되고 통일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결과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한 RCEP 당사국들간의 보다 긴밀한 연결을 초래할 것입니다.

³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1000437>

⁴ 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5년(최대 8년까지 연장가능) 동안 해당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의 경우 협정 발효 후 5년간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4분기 주요 통상뉴스

(2020.08.01. – 2020.11.30.)

EU 집행위원회, 돔브로브스키스(Dombrovskis)를 새로운 EU 통상 위원장으로 임명 (09.08.), EU 의회 표결통과(10.07.)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덴(Ursula von der Leyen)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를 새로운 EU 통상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돔브로브스키스는 라트라 비아 총리를 역임하였고 3명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

새로운 EU 통상 위원장은 미국과의 항공기를 비롯한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ies) 및 규제 협력(regulation cooperation) 이슈뿐만이 아니라, EU 그린딜(Green Deal)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 측면을 다룰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대서양 관계 복원을 통하여 미국과 WTO 개혁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10월 7일 유럽의회에서 동 건이 표결되어 통과되었다.

Key word #EU #Trade commission #돔브로브스키스 #그린딜 #산업보조금

대(對) 중국 301조 관세 조치에 위반 판정(9.15) 및 미국, WTO 패널 결정에 항소(10.26)

WTO 패널은 미국 정부가 제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관세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MFN 및 관세양허 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a)항에 규정된 공중도덕(public moral)에 따라 정당화 된다고 주장했지만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패널의 결정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미국은 해당 패널보고서가 부정확한 사실 정보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차원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설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한편,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 이번 상소 건은 12개가 넘는 다른 분쟁들과 함께 상소기구에 계류 중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미국이 자국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하여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 상태를 남용하고 있다며 반발하였다.

Key word #불공정행위 #Section 301 #중국 #미국 #공중도덕 #GATT 제20조

미국 상무부, 환율 상계관세 활용 본격화(10.02./11.24.)

미국 정부는 10월 2일 베트남의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환율 저평가에 대한 제301조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어 10월 30일에는 베트남 정부가 환율개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긍정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최종 판정은 2021년 3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2월에 관련 규정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해당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1월24일에는 중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통한 위안화 저평가를 보조금으로 간주하며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twist ties)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다. 본건에 대한 상무부의 예비 조사 결과는 2021년 2월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에서 중국은 일방적인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환율 저평가 상계관세는 WTO 보조금협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올해 8월 IMF는 미국정부의 환율 상계관세가 다자간 무역 및 국제통화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올 것을 경고하였다.

Key word #환율 저평가 상계관세 #제301조 #불공정무역행위 #보조금 #IMF

COVID-19와 관련한 WTO TRIPS 논의 (10.15); 오타와 그룹의 통상과 보건 이니셔티브(11.23.)

10월 15일 WTO TRIPS 위원회에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COVID-19에 대한 국제적 대응 차원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취지의 제도, 즉, TRIPS 웨이버(waiver)를 제안하였다. 제안국들은 백신이나 의료기기 혹은 필수적 의료장비들에 대한 적기 접근과 관련 연구개발 및 제작,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TRIPS 협정상의 특정 의무들에 대한 일시적인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멕시코, 이집트 등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은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향후 백신 등을 개발하는 혁신을 촉진하고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 EU, 캐나다, 일본을 비롯하여 1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오타와 그룹(Ottawa Group)은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무역제한적 조치들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 합의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필수적 의료상품의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타와 그룹은 캐나다가 주도로 13개국의 WTO 중진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타와 그룹이 제출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는 12월에 진행될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Key word #COVID-19 #지식재산권 #TRIPS 의무 면제 #의료용품 #WTO #오타와 그룹

중국 5개년 통상계획 발표(10.26~10.29.); 미국,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예정(11.04.)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월 26~29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제14차 5개년 (2021~2025년) 통상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일본 및 한국을 비롯하여 더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1월 15일 중국은 세계최대의 FTA인 RCEP에 서명하였고, 11월 20일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CPTPP 가입도 긍정적으로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의 제2단계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해리스(Joe Biden-Harris)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 되었다. 2021년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이 예고되면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취하던 일방적인 관세부과 방식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통상정책의 방향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상정책보다는 코로나-19의 수습 등 국내 정책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Key word #미국 #바이든-해리스 #중국 #시진핑 #통상정책

WTO 사무총장 선출 교착상태(11.09.); 상소기구 마지막 위원 임기 종료(11.30.)

11월 9일 DSB 회의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킨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후보가 WTO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로 선출되었다. 오킨조이웨알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세계은행의 총재로도 활동하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고집함에 따라 WTO 회원국간의 만장일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마지막 남은 상소위원인 중국 출신 저우 홍(Zhao Hong)의 임기가 11월30일자로 종료되었다. 지난 2019년 이미 세 명 위원 중 두 명의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상소기구 기능은 공식적으로 마비가 된 상태로 현재 다수의 분쟁이 미래 진행상황이 불확실한 상태로 상소기구에 계류 중이다. 퇴임사에서 저우 홍은 상소기구를 비롯한 WTO의 개혁을 위해서 국가간의 대타협(grand bargain)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Key word #WTO 사무총장 #Ngozi Okonjo-Iweala #유명희 #WTO 상소기구 #Zhao Hong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 (11.15)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월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는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20개 챕터와 17개 부속서로 구성된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 · 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 · 지역화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非아세안국(AFP: ASEAN FTA Partners) 조정국(facilitator)을 장기간 수행하며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Key word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계 최대 FTA #ASEAN #한중일 #GVC

APEC, 제31차 합동각료회의 개최(11.16.) 및 ‘2020 APEC 정상선언문’ 채택 (11.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외교, 통상장차관들은 제31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 필수품 및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 WTO 개혁지지, 미래비전(가제, APEC Post-2020 Vision), 디지털 경제 및 기술혁신을 위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촉진,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작성된 2020년 경제정책보고서 주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

이어 11월20일 개최된 제27차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의 주제인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Pivot, Priorities, Progress)를 반영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APEC 정상선언문 채택은 지난 2017년 다낭선언 이후 3년만이다. 그 내용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충격 완화를 위한 보건 · 경제 협력,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등이 포함되었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는 무역투자 담론 개선, 디지털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 참여,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ey word #APEC 정상회의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G20 정상회의 개최 및 정상선언문 채택(11.23.)

전세계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11월 21~22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원력 있는 장기간 지속되는 회복 구축(Building a Resilient and Long-Lasting Recovery)을 주제로 한 제2세션은 보건, 무역과 투자, 디지털 경제 및 국제 조세 분야 등에 대한 언급이 담겨져 있다.

G20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시스템의 중요성을 여전히 지지하며, 지난 3월 G20의 무역 및 투자 작업그룹이 WTO의 미래에 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가 G20국가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설정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개방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보호와 권한 부여를 지지하며,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과 안보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 G20 회원국 정상들은 2021년 중반까지 G20/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관한 포용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있다.

[Key
word]

#G20 #리야드 이니셔티브 #WTO개혁 #디지털경제 #국제조세 #BEPS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

세종 국제통상법센터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에 시의성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부속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법무법인(유)세종이 쌓아온 통상역량을 결집하여, 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의 고객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구성원

센 터 장 김두식 (대표변호사)

고 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주일대사) | 백주현 (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주러시아 경제참사관) |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김도열 (전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국제통상 전재민 (변호사) | 윤영원 (변호사) | 김재희 (변호사) | 이상협 (변호사) | 오미연 (캐나다, 미국변호사) | 박경진 (박사, 전문위원) | 김나영 (전문위원)

무역구제 강정수 (공인회계사) | 조명성 (공인회계사) | 장슬기 (미국회계사) | 장유림 (영국회계사)

관 세 우도훈 (변호사) | 한정화 (관세사) | 정진용 (관세사)

연 락 처 02-316-4114 www.shinkim.com